

## 25년 정책금융공급 기본방향 및 수요조사 계획

(‘24.9.25, 산업금융과)

### 1 추진 경과

- ‘23년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운영을 통해 **산업정책과 정책금융 공급간의 연계** 확보
  - 이를 통해 정책금융기관이 산업정책과 단절되어 정책자금 공급규모를 결정(Top-Down)하는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는데 기여
- 특히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5대 중점 자금공급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 정책금융 공급 목표액의 상당부분 집중 배분
  - ‘23년도는 산은·기은·신보의 전체 공급목표액(205조원)의 40%인 81조원을 5대 중점분야(40개 부문)에 배분한 데 이어,
  - ‘24년에는 기보가 참여하게 되어 4개기관 공급목표가 216조원 → 240조원으로 늘어나게 되었고,
    - 이 중 5대 중점분야에 48%인 (102.4조원→) 116조원을 집중 공급

【‘24년도 5대 중점 전략분야 정책자금 공급 계획(기보 참여 후)】

5대 중점 분야 총 116조원	해당부문 및 지원규모(주요분야)		
<b>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</b> (18.9조원)	· 반도체(4.0조원) · 디스플레이(1.3조원)	· 이차전지(6.0조원) · 미래차(4.4조원)	· 원전생태계(3.3조원)
<b>미래유망산업 지원</b> (30.9조원)	· 바이오헬스(7.2조원) · 수소생태계(1.2조원) · ICT 디지털(5.5조원) · 항공우주 탄소소재(1.9조원) · 방위산업(3.8조원)	· 나노소재(1.6조원) · 미디어콘텐츠(1.8조원) · 해양수산신산업(1.0조원) · 양자(0.1조원)	· 국토교통(1.4조원) · 통신(5G)(0.9조원) <b>신규</b> · 농식품신산업(4.2조원) · 딥사이언스(0.2조원) <b>신규</b>
<b>사업재편 및 산업구조고도화</b> (24.3조원)	· 자동차부품산업(7.3조원) · 철강산업(4.3조원) · 항만장비(0.4조원)	· 정유산업(1.6조원) · 산업적위대응(1.1조원) · 조선산업(3.1조원)	· 섬유산업(3.5조원) · 광학산업(0.4조원) · 플라스틱·사멘트(27조원)
<b>유니콘 벤처· 중소·중견 육성</b> (12.8조원)	· 우수 스타트업(0.8조원) · 우수P보유(1.1조원) <b>신규</b> · 신산업 중견(0.3조원) <b>신규</b>	· 우수 중견(1.8조원) · 지역 우수중소 (0.7조원) <b>신규</b> · 글로벌 강소(0.8조원) <b>신규</b>	· 공공 실험실 창업기업(0.02조원) <b>신규</b>
<b>기업 경영애로 해소</b> (29.0조원)	· 기계 전기산업(15.1조원)	· 경영애로 해소(13.9조원)	

⇒ 내년에도 부처중점사업 및 산업별 주요현안을 정책금융 지원 계획에 효율적으로 반영

**참고 1**

**정책금융지원협의회 공급계획 활용 사례**

- 정책금융공급계획에 산업정책 방향과 산업별 수요를 반영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자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뿐 아니라,
  - 각 부처에서는 정책금융공급액·전년比 증가 등을 활용하여 각종 정책 발표 시 사용하고 있음
  -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정책금융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, 풍부하고 종합적인 대안 마련에 기여

**[`24년중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확정된 공급계획 활용사례]**

- (국조실 첨단전략산업위원회) 국가첨단위에서는 첨단산업(반도체·이차전지·디스플레이·바이오)에 `24년 중 14.7조원을 집중 공급하기로 함(`23.12.21)
- (산업부 민생토론회) 반도체생태계도약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3년간 24조원의 정책금융\* 공급(`24.1.15)
  - \* 산은·기은·신보의 반도체 분야 연간 공급액(3.6조원) 활용하여 3년 추산
- (과기부 국가전략기술 기본계획) 투자·용자·이자지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정책금융 규모 확대 (`24.8.26)
- (범부처 첨단전략산업 TF) 이차전지·전기차, 석유화학 등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금액 확대(`24.9~10월 논의중)
- 시멘트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공급액(0.7조원)은 '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'에 활용 (10.2일 경제장관회의 상정예정)

- 매 분기 개최되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서 최신트렌드를 반영하여 정책금융지원계획을 수정반영·발표하고 있으나,

※ 예: 금년들어 산업적 관심이 확대된 AI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수요 확대에 대응하도록 3.5조원 규모의 AI분야 정책금융 집중공급방안 마련(`24.7월,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)

- 연초 확정된 공급계획의 틀을 대폭 수정하기는 어려운 측면

⇒ 연간계획 수립 전에 부처중점산업 및 주요현안을 충실히 제출하여 차년도 정책금융 지원계획에 효율적으로 반영 필요

## 2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 기본방향

① (양적 증가 최소화) 4개 정책금융기관의 전체 공급 총량은 금년 ('24년 240조원)과 유사(전년 동 또는 소폭 증가)하게 유지

- 코로나 19 위기를 거치며 정책금융은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\*  
↳ 규모가 과도하고 민간과의 중첩 등 비판도 존재

\* 산은·기은·신보·기보 합계 '19년 공급액 217.5조원 → '23년 264.9조원(+47.4조원, +21.8%)

- 정책금융이 규모 확대에 치중하기보다는 민간과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분야에 보다 내실있게 공급될 필요

② (질적 효율화 추진)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한 5대 중점분야에 집중공급하고 단순 대출 외 투자 등도 적극 확대

- 현행 5대 중점분야 40대 부문을 필요시 개선(신규산업 추가 or 기존산업 삭제)하고 중점분야에 집중공급\*

\* '24년에는 총 정책금융공급계획(4개기관 240조원)의 48%(116조원)를 집중 → 추가 확대

- 부처별 수요조사를 통해 산업정책 및 주요현안사항을 파악  
+ 산은 연구소·산업연구원 등을 통해 산업트렌드 변화 파악

↳ 시장상황 변화 및 주요정책과제에 정책금융공급을 집중

- 현재는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 대출·보증\*으로 구성되어 있는데, 투자의 비중을 대폭 확대

\* 산업부처 수요조사도 대출보증에 집중 ↳ 5대분야 102조원 중 투자자금은 1,500억원에 불과

③ (성과관리 추진) 성장지원펀드를 시작으로 정책금융의 투입에 따른 기업의 재무(성장성·수익성), 비재무(고용) 성과분석 추진 중

- '25년부터는 펀드 및 정책금융 전반에 대한 성과분석을 추진, 성과에 따라 미래투입계획을 연동하는 환류(feedback)체계 마련

### 3 수요조사 계획 및 향후 일정

- 부처별 수요조사를 통해 산업정책 및 주요현안사안을 파악
  - ↳ 수요조사 양식(별첨)에 맞추어 작성·제출 요청(~10월말)

- 수요 조사 이후 실무협의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, 필요시 5대 분야 40대 부문을 개선\*

\* 제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7개산업을 중점 지원대상으로 추가한 바 있음  
 ↳ 항공우주, 탄소소재, 양자기술, 방위, 농식품신산업, 플라스틱·시멘트(탄소중립)

- 정책금융 필요성, 공급 여력 및 실적, 시장변화 등을 고려하여 '25년도 정책금융 총 공급규모 잠정\* 결정(금융위·정책금융기관, 11월)

\* 최종 규모는 정책금융기관별 업무계획(금융위 승인사항)으로 확정(연말)

**【정책금융기관별 총 자금공급 계획】**

구분	산은	기은	신보	(기보)	합계
'22년	70.0	69.0	55.1	(24.8)	<b>194.1</b>
'23년	73.5	71.0	60.5	(26.0)	<b>205.0</b>
'24년	<b>77.0</b>	<b>74.0</b>	<b>61.0</b>	<b>28.5</b>	<b>240.5</b>

- '25년도 총 공급규모 내에서 5대 중점분야 및 세부 산업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규모 확정 (12월 정책금융지원협의회)

\* '24년도에는 총 정책금융 공급계획(212조원)의 48%(102조원)을 5대 분야에 집중

**【수요 제출시 고려 필요사항】**

- 일부부처는 예산기반의 보조금으로 오인하는 경향 ↳ 특정사업을 위한 예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며, 부처가 중점으로 생각하는 산업·분야에 보다 많은 금융공급을 추진하기 위한 취지임을 이해
- 예산편성과정으로 오해하여 무리한 금액을 요청하여 큰 금액을 삭감하는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향
  - ↳ 부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정책금융기관이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, 무리한 금액보다는 추진정책의 중요성, 시장상황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람직
- 특정기업을 지정하여 대출을 하려는 취지 아님 ↳ 특정기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각 기관의 여신·보증심사를 거치는 경우 파악 가능